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54호
2022. 5. 2

정책동향

-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재원조달 체계 마련 필요
- 주택공급 확대, 시스템과 산업이 받쳐줄 때 성공 가능

산업정보

- 건설업 품질과 안전을 위한 일자리 질적 개선 필요
- 중소·중견기업 안전관리자, 지원자 ↓ 이·퇴직 비율 ↑

건설논단

- 건설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자원조달 체계 마련 필요

–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의 효율적 결합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 기반시설 관리 체계가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

- 지난 2018년 12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하위법령 제정(2020년 1월 시행),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2020년 4월), 기본계획(2020년 5월) 및 관리계획(2021년 12월) 수립 완료 등 핵심 관리체계가 마련됨.
- 현 기반시설 관리체계는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5종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부가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구조임.¹⁾
- 법 제정 이후 이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들이 단계적으로 제정됨. 2020년 5월에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이 의결되었고, 동년 12월에 6개 중앙부처와 서울·광주시의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그리고 2021년 12월에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됨.
- 2020년부터 15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DB화를 위한 ‘인프라 총조사’와 함께,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정보화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2023년에 완료될 예정임.

■ 기반시설 관리재원의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 존재

- 2019년도 기준 연 12조원 수준인 기반시설 관리비용은 향후 30년간 약 1천조원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기반시설 관리비용 증가 예상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12),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p.3의 그림 인용.

1) 「기본법」 제8조 및 9조 참고.

- 이에 정부는 작년 말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을 발표함. 하지만 동 방안에서 제시된 투자재원 다각화와 관련된 과제들의 경우 조달가능자금의 규모와 안정적인 기반시설에의 투자채널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표 1>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성능평가 기반 자산관리를 통해 기반시설 100세 장수명화	① 기반시설 관리주체 지원 강화	- 기반시설 성능투자에 따른 적정 자산가치 반영 - 누구나 이용가능한 자산관리시스템 및 표준 관리모델 구축 - 시설별 최적 투자시기·방식 분석기법 개발 - 기반시설 총괄관리 기능 강화
	② 기반시설 관리 이행력 보강	- 관리주체 실행계획 수립 - 기반시설 종합투자계획 수립 - 시설별 인프라 성능카드 발간 - 지자체 평가·환류체계 강화
	③ 투자재원 다각화	-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 활성화 - 지역개발기금 활용 - 사업계약 낙찰차액 활용 활성화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비용 활용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12.),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 정리.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자원조달체계 마련이 필요

- 약화된 재정여력 하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모든 재원을 재정을 통해 조달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시설물의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정부재정-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의 결합-순수 민간자본’의 순으로 재원을 조달해 활용할 수 있는 다층적 자원조달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비수익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①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시설특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전입이 이뤄지는 (가칭) ‘기반시설관리기금’을 조성해 운용할 필요가 있고, ②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거나 별도 기금조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한 뒤, 자발적인 관리노력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가 기반시설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관련 법에 따른 개발계약이 적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공공기관 주도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위탁개발사업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 민간에 사업시행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공익적 성격이 크지 않은 수익성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정주(연구위원 · kjj@cerik.re.kr)

주택공급 확대, 시스템과 산업이 받쳐줄 때 성공 가능

- 독일과 영국 사례 분석... 공급기간 단축, COST 절감, 미래 대응 함께 고민해야 -

독일·영국 연간 주택공급 목표치 공약, 우리와 유사²⁾

- 새 정부는 5년간 전국 250만호 주택공급을 목표로 제시하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함.
 - 최근 준공 추이를 감안하면 연간 50만호 공급은 우리나라 공급 시스템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신규 공급은 개발을 수반하며 이는 공급 시차와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기도 함.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과 영국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독일은 다양한 참여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을 수행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공급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추가 지원 요구도 큼.
 - 최근 10년(2011년 4Q ~ 2021년 3Q)간 독일의 주택가격은 81.3% 상승하였고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음에도 신규 계약을 중심으로 임대료 불안이 지속됨.
 - 도시의 쾌적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택개발 반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은 유럽 내에서도 사회적 갈등이 큰 정책임.
 - 2014년부터 다양한 시장 참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을 발굴하였고, 발굴된 정책은 2016년 이후 10대 주택공급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 ※ ① 저렴한 공공 토지 공급, ② 개발 유도 및 고밀화, ③ 사회주택 연간 10억 유로 지원, ④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⑤ 건축 규정 정비, ⑥ 건설 표준화, ⑦ 건설 기술 지원, ⑧ 주차 규제 유연화, ⑨ 에너지 효율화, ⑩ 공급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공급정책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 법률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실적은 2021년 2월 현재 100만건 이상 달성함.
 - 그러나, 2020년 연간 신규 공급은 30만호를 소폭 상회하여 정부 목표치인 40만호를 밑돌고 있음. 이에 추가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건설 보조금, 사회주택 보조금 등)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영국은 주택공급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1947년에 근간을 두고 있는 계획 시스템으로 진단하고 2020년 이후 도시계획의 근원적 개혁(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최근 10년(2012년 ~ 2021년)간 영국의 주택가격은 64.5% 상승하였고 런던은 78.4%에 달함.

2) 본고는 “허윤경, 주택공급확대 정책과 유럽의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주거복지포럼의 공동세미나(2022. 4. 22)”의 발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함.

- 2015년 총선 공약에서 보수당의 주택공급 목표치가 등장하였고, 2019년 총선에서는 모든 정당이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함.
- 2017년 발표된 영국 정부의 장기 주택공급 계획에서는 양질 입지의 주택공급, 공급기간 단축, 공급주체 다양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① 지방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계획, ② 토지 확보 노력, ③ 개발 밀도 조정, ④ 거버넌스와 인허가 개선, ⑤ 인프라 공급, ⑥ 계획 조건 간소화, ⑦ 지방정부 역할 강화, ⑧ 중소건설사 성장 지원, ⑨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⑩ 스마트 시공 촉진
- 2020년에는 계획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 중임. 간소화, 디지털화, 표준화, 부담금 개혁을 통해 주택공급 기간 단축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함.

■ 250만호 공급기간 동안, 주택산업 선진화·미래 대응 함께 이뤄야

- 두 국가 모두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독일은 연간 40만호, 영국은 30만호 주택공급 목표치를 제시하며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있음.
 - 주택문제는 독일과 영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주요한 선거 공약이 됨. 주택 관련 종합대책 발표,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두 국가는 우리보다 일찍 공급정책으로 선회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규제는 정부 단독으로 하지만, 공급은 시스템과 산업이 수행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효과를 낼 수 있음.
 - 팬데믹 영향, 정책 효과 미미 등 주택공급은 원활하지 않은데 주택가격 상승세는 장기화되면서 주택공급 목표치가 상향됨.
 - 또한, 기발표된 정책에 더해 추가 지원 요구 및 근원적 시스템 변화 요구 등도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50만호를 공급하는 동안 주택산업 선진화와 미래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함.
 - 사회적 갈등 조율은 시간이 소요되나, 협의체, 캠페인, 시민 참여 유도 등 공급확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개발이익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이나, 민간의 특정 주제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시스템 정교화가 뒤따라야 할 것임.
 - 공급기간 단축(인허가, 도시계획 개편 등), COST 절감(건축 표준화, 스마트 시공 등) 등 시스템 개편 및 산업 선진화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근원적 변화 노력은 사회적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됨.
 - 스마트 건설, 제로에너지 대응 등 미래 대응을 위한 공공의 목표도 달성해야 함. 영국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담가능 주택공급 중 25%는 모듈러 시공 등 MMC(modern method construction) 사용을 의무화함. 독일은 모든 신축에 에너지효율 표준을 도입하여 제로에너지에 대응하고 있음.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건설업 품질과 안전을 위한 일자리 질적 개선 필요

- 건설업 일자리 이동자 비율 35%, 타 산업 이동자 비율 9.7%... 고용 불안정성 심각 -

■ 건설업 일자리 이동자 비율은 35%로 전 산업에서 가장 높아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211만 5,000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함. 이는 제조업, 도·소매업의 뒤를 잇는 수치로 전(全) 산업에서 건설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고용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산업 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표 1>에서와 같이 2019년 기준 건설업 이동자 비율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1> 산업 대분류별 일자리 이동 현황(등록취업자 기준)

(단위 : 천명, %)

산업 대분류	2018년 → 2019년				2017년 → 2018년			
	계	진입자	유지자	이동자	계	진입자	유지자	이동자
전 체 (구성비)	24,358 (100.0)	3,912 (16.1)	16,571 (68.0)	3,876 (15.9)	23,837 (100.0)	3,892 (16.3)	16,001 (67.1)	3,944 (16.5)
제조업	4,744(100.0) (100.0)	517 (10.9)	3,648 (76.9)	578 (12.2)	4,713 (100.0)	515 (10.9)	3,558 (75.5)	641 (13.6)
건설업	2,187 (100.0)	398 (18.2)	1,022 (46.8)	766 (35.0)	2,195 (100.0)	424 (19.3)	994 (45.3)	777 (35.4)
도·소매업	3,095 (100.0)	515 (16.7)	2,157 (69.7)	423 (13.7)	3,127 (100.0)	553 (17.7)	2,127 (68.0)	447 (14.3)
운수업	1,145 (100.0)	124 (10.8)	910 (79.5)	111 (9.7)	1,135 (100.0)	122 (10.8)	898 (79.1)	115 (10.1)
숙박·음식점업	1,805 (100.0)	522 (28.9)	965 (53.5)	319 (17.6)	1,762 (100.0)	526 (29.9)	923 (52.4)	313 (17.7)
사업시설·지원업	1,605 (100.0)	304 (19.0)	866 (53.9)	435 (27.1)	1,649 (100.0)	320 (19.4)	850 (51.6)	478 (29.0)
공공행정	1,297 (100.0)	173 (13.3)	1,051 (81.0)	73 (5.6)	1,218 (100.0)	155 (12.8)	990 (81.3)	72 (5.9)
교육서비스업	1,422 (100.0)	182 (12.8)	1,119 (78.7)	122 (8.6)	1,383 (100.0)	182 (13.2)	1,082 (78.3)	119 (8.6)
보건·사회복지업	2,170 (100.0)	410 (18.9)	1,401 (64.6)	358 (16.5)	1,983 (100.0)	318 (16.0)	1,318 (66.5)	347 (17.5)

주 : 2019년 기준 등록취업자 100만 명 이상인 산업 기준으로 미등록자(비교 년도(t-1)의 주된 일자리가 기업체 소멸, 사업축소 등으로 기준 년도(t) 일자리에 미등록된 사람)는 제외함.

자료 : 통계청(2021.6.8),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

-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진입자³⁾ 비율은 숙박·음식점업이 28.9%, 보건·사회복지업이 18.9%, 건설업이 18.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자리 유지자⁴⁾ 비율은 공공행정업이 81%, 운수업이 79.5%, 교육서비스업이 78.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건설업은 46.8%로 전 산업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일자리 이동자⁵⁾ 비율은 건설업이 35%, 사업시설·지원업이 27.1%, 보건·사회복지업이 16.5% 순으로 높게 나타남. 건설업의 경우 전 산업에서 일자리 유지자 비율은 가장 낮으면서 이동자 비율은 가장 높아 타(他) 산업에 비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타 산업으로의 이동도 건설업은 전 산업 중 3번째로 높아

- 산업별 일자리 유입과 유출 이동자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산업 내 3번째로 유출입 이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즉, 건설업은 여전히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질(質)적 측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함.
-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 산업별 → 산업별 이동자’의 경우 사업시설·지원업이 14.5%, 건설업이 8.9%,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8.8% 순으로 높게 나타남. 상위권으로 꼽힌 산업의 경우 근로자가 일자리 이동 시 타 산업보다 산업 내 진입 장벽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산업별 → 타 산업별 이동자’를 살펴보면, 사업시설·지원업이 16.2%, 숙박·음식점업이 10.2%, 건설업이 9.7%, 도·소매업이 8.8%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들 산업은 근로자의 일자리 진입이 용이한 만큼 이탈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건설업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부정적 인식 존재해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건설업은 여전히 일자리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3D(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설문조사(2020)⁶⁾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0%가 ‘필요하다’고 답함.
- 건설업 일자리에 대한 낮은 질적 가치 인식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생산물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건설업은 여전히 현장 내 인력의 고령화, 청년층 취업 기피 및 불법 외국인력 문제 등으로

3) 비교 년도(t-1)에는 미등록 상태였으나 기준 년도(t) 주된 일자리에 등록된 사람.

4) 비교 년도(t-1)와 기준 년도(t)에 걸쳐 주된 일자리가 동일 기업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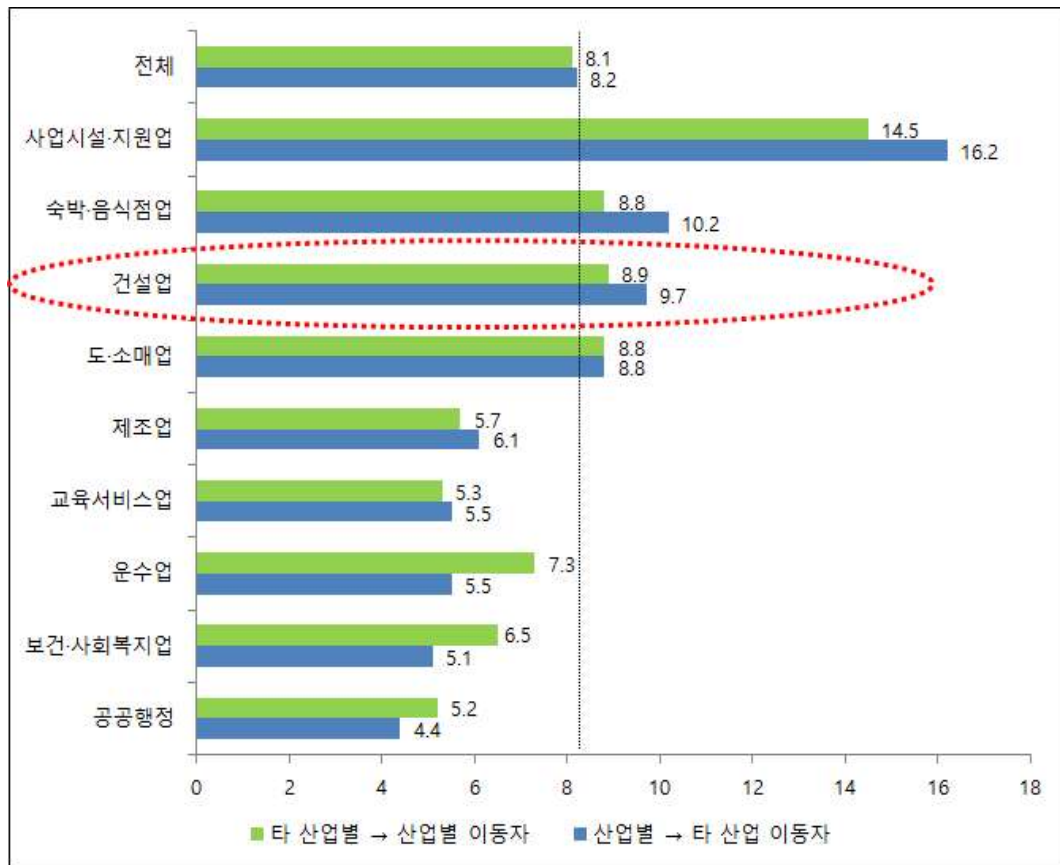
5) 비교 년도(t-1)와 기준 년도(t) 간에 이직 등의 사유로 기준 년도(t)의 주된 일자리가 비교 년도(t-1)와 달라진 경우.

6) 최은정(2020. 12), 「건설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림1> 산업 대분류별 산업간 일자리 유출·입 이동자 현황(2018→2019)

(단위 : %)



주 : 2019년 기준 등록취업자 100만 명 이상인 산업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 유출입 중 산업별 → 타 산업 이동자, 타 산업별 → 산업별 이동자 데이터만을 활용함.

자료 : 통계청(2021.6.8.),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

■ 근로자의 안전 및 생산물의 품질 향상 위해 건설업 일자리의 질 향상은 중요

- 따라서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현장 내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건설업을 주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한 사안임.
 - 이를 위해 현장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 건설’, ‘근로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두어 ‘일하고 싶은 산업’, ‘직업으로 삼고 싶은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세대(generation)가 원하는 작업 환경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어떠한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중소·중견기업 안전관리자, 지원자 ↓ 이·퇴직 비율 ↑

- 현장 안전관리자 크게 감소, 이퇴직자 비율은 39.7%에 달해 -

■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 안전관리자 평균 2.89명 배치, 60.6%는 건설안전 자격증 보유

-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⁷⁾ 중소건설기업은 평균 2.3명, 중견기업은 9.71명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건설안전(산업)기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안전관리자의 자격사항은 건설안전(산업)기사가 60.6%로 가장 많고, 산업안전(산업)기사 30.5%, 기타 7.3%, 기술사 1.7% 순이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해도 대동소이했음.

<표 1> 기업이 보유한 현장 배치 안전관리자의 규모

구분	소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응답기업 수	264개	243개	21개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수	763명	559명	204명
기업당 평균 배치 인원	2.89명	2.30명	9.71명

<표 2> 기업이 보유한 현장 배치 안전관리자의 자격사항

구분	소계	자격 구분			
		기술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기타
전체	658명	11명 (1.7%)	201명 (30.5%)	399명 (60.6%)	48명 (7.3%)
중소기업	496명	11명 (2.2%)	146명 (29.4%)	295명 (59.5%)	44명 (8.9%)
중견기업	162명	-	55명 (34.0%)	104명 (64.2%)	4명 (2.5%)

■ 응답기업 중 29.2%는 안전관리자가 타 업무 겸직, 복수 현장 배치 비율은 3.4%

-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겸직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29.2%이며 인원 기준으로는 응답기업의 안전관리자 중 16.8%인 것으로 조사됨.
- 겸직 인원의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1.1%, 중견기업은 4.9%로 중소기업이 더 높았으며, 복수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은 응답기업의 3.4%, 인원의 1.3%로 조사됨.

7) 본 설문조사는 대한건설협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안전관리자 수급 확보 방안' 연구 활용을 목적으로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중소·중견 종합건설기업 303개사가 응답하였음.

<표 3> 안전관리 외 타 업무의 겸직 또는 복수 현장 배치 인원

구분	안전관리 외 타 업무 겸직		복수 현장 안전관리 배치	
	기업 수	배치 인원	기업 수	배치 인원
전체	77개 (29.2%)	128명 (16.8%)	9개 (3.4%)	10명 (1.3%)
중소기업	71개 (29.2%)	118명 (21.1%)	8개 (3.3%)	9명 (1.6%)
중견기업	6개 (28.6%)	10명 (4.9%)	1개 (4.8%)	1명 (0.04%)

■ 안전관리자의 39.7%가 계약기간 이내에 이·퇴직

- 응답기업 중 중소기업의 38.5%, 중견기업의 52.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가 계약기간 이내에 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함.
- 안전관리자 수 기준으로는 중소기업 56.5%, 중견기업의 22.4%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이·퇴직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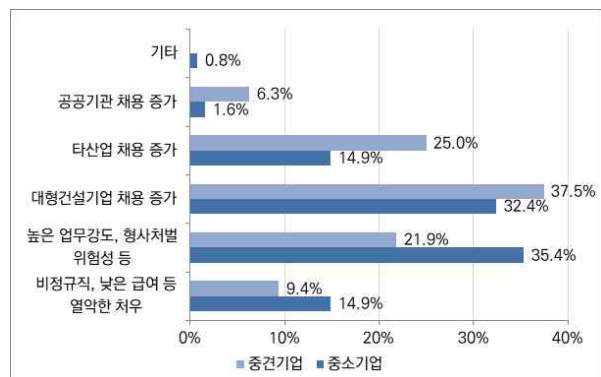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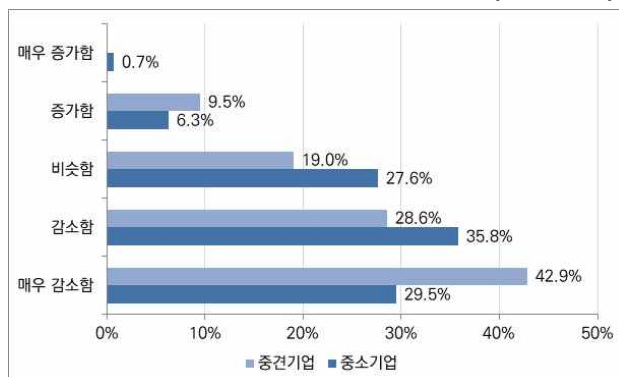
<표 4>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 안전관리자의 이·퇴직 사례

구분	응답 수 소계	이·퇴직 사례 존재			이·퇴직 사례 없음	
		응답 수	배치 인원	이·퇴직 인원	응답 수	배치 인원
전체	234	93 (39.7%)	359	151 (42.1%)	141	392
중소기업	213	82 (38.5%)	207	117 (56.5%)	131	340
중견기업	21	11 (52.4%)	152	34 (22.4%)	10	52

■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 크게 감소, 수급 여건 악화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매우 감소 또는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중소기업의 65.3%, 중견기업의 71.4%를 차지했음.
- 취업 지원자 수 감소 원인으로는 ‘대형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그림 1> 안전관리자 지원자 수 변화(최근 1년) <그림 2>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 감소 원인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건설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 파리기후협약 이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과 실질적인 이행이 강조됐다. 국내에서도 2020년 12월, 정부 ‘2050 탄소중립전략’을 발표하고, 2021년 10월에는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발표했다. 이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도 ‘건설분야 탄소중립 이행전략’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에너지 저감 및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탄소 규제의 강화와 국내외의 강력한 환경정책 추진은 우리 건설산업의 큰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건축물 및 건설과정에서의 에너지 소요량과 탄소 배출량은 전체 에너지 소요량과 탄소 배출량에서 각각 36%, 37%를 차지한다. 그만큼 탄소 배출관리와 에너지 저감에 있어 건설산업에 대한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현재도 건설산업은 에너지 및 환경 규제가 심한 산업에 속한다.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 및 탄소 배출 감소와 관련한 사실상의 규제인 인증제도나 행정 절차가 지금도 많이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장수명 인증’ 등과 더불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에너지 절약 계획서’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등도 시행 중이다. 더 나아가 공공 공사 입찰 평가에 활용되는 ‘입찰참가자 사전자격 심의기준(PQ)’에서도 각종 인증은 가점 항목이고, 환경 관련 법령 위반은 감점 항목이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건설기업들은 향후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금도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영업 및 자재·장비 조달, 전반적인 생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으로서는 최근의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움직임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

안’의 핵심 정책과제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2012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제정 이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이 2014년 발표됐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2017년 시행됐으며,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그리고 건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에 의거해 2020년, 1000㎡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됐으며 최근 국토교통부는 30가구 이상 민간 분양 및 임대 공동주택에의 의무화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이 직면한 현실의 장벽은 높다. 실질적으로 의무대상인 공공건축물을 제외하고, 민간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은 여전히 드물고,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들은 인증등급 중에서도 낮은 등급인 4, 5등급이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향후 정부의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공공건축물의 사례와 같이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 정책의 실질적인 목표 즉, 에너지 저감과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의 이행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산업이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이행의 중심적인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 그리고 건축시장의 에너지·환경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건설산업 내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의 유인책 마련 그리고, 건설산업의 성숙도를 감안한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이 다른 어느 산업에서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아주경제, 4.6>